



|    |  |
|----|--|
|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신 |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 문의 |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서희원·조성훈간사 / 02-3673-2141)              |
| 일자 | 2016. 6. 11.(월)                                      |
| 제목 | [보도자료]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자 75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 비교분석 발표(총 2매) |

## 서울시장 후보자

### 75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 비교분석 발표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 정책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보여 ...
  - 연내 개헌 추진,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도입, 무상생리대 지원, 미세먼지 이슈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낸 후보자들도 눈에 띄어 ...
1.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는 지역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당연시하며,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2. 경실련은 비례대표식 정당명부제로 정당투표가 가능해진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정책선거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후보자)에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 입장을 묻고, 이를 비교분석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해왔다.
  3. 경실련은 17개 시도에서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얻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는 75개 정책현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로, 75개 정책 중 32개 정책에 있어서만 입장을 같이하여 총 42.66%의 일치도를 보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만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연내 개헌 추진에 반대했으며,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에는 찬성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확대에 반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 전환을 반대했고, 안철수 후보만이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생리대 지원에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는 박원순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차량2부제 실시에 반대했다.

4.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 구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후보자별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의 현저성 역시 존재함을 시사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탓하지 말고, 꼼꼼히 정책입장을 비교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6.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실련은 지역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이 경실련의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별첨.1 :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분석결과

# 별첨.2 : 6·13 지방선거 후보자별 정책 답변서